

# “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정부의 한·미FTA 타결안”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남아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전체 국익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정답인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국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몇배에 해당하는 메가톤급 변화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

2006년 2월에 시작한 한미FTA 협상이 제8차에 걸쳐 논쟁을 벌인 끝에 2007년 4월에 마침내 타결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이익과 손해가 엇갈리는 경제부문별로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재계 지도자와 경제단체 등 비농업부문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 농민단체와 농업생산자들은 협상 무효를 주장하며 비준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한다.

FTA는 원천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문과 피해를 보는 부문이 구분되는 비대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예컨대 미국과의 FTA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취약 산업인 농업이 생존권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미 FTA협상개시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 준 사회적 합의 도출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은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부가 도출해낸 한미 FTA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품목에 대한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와 계절관세 도입, 식용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유지, 그리고 수입급증에 대비한 긴급관세 조치 도입 등은 농업부문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



야가 바로 우리 농업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속히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농업 농촌발전대책을 보완한 내실 있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생산농가와 농민단체의 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

오리업계의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면 9개 세분류 중에서 2개품목인 미절단냉동식품과 절단냉동식품은 12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7개품목은 10년후에 무관세화하기로 타결되었다. 참고로 2006년도의 양허관세는 18%(4품목), 22.5%(3품목), 27%(2품목) 등이며, 살아있는 오리는 20%(중오리 초생추등 2품목)이다.

금년 4월초에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부는 경쟁력제고 방안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2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오리고기 포장시에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여 수입육과 구분하고, 또 하나는 2008년부터 사육단계에 HACCP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대책은 유통개선으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은 너무 빈약하며, 오리가공 공장과 오리사육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오리산업에 대한 기초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그 효과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 첫째, 오리사육의 마리수와 가구수가 과연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행정통계로 매년말에 1회 조사되고 있으나, 적어도 6개월마다 1회씩 연간 2회는 조사통계가 PS와 F1을 구분하여 발표되어야 한다.

- 둘째, 오리사의 표준설계도가 있어야 농가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이러한 표준규격에 알맞은 축사라야 HACCP지원도 받고, 축사시설의 개축이나,

자연피해 시에 정부의 보상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HS코드가 오리고기, 거위고기, 기니아새 고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리고기가 얼마나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를 기니아새 고기라고 하거나, 거위고기라고 할 때도 별 문제없이 통관되어, 피해는 오리농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꼭 HS코드가 분리되어야 한다.

- 넷째, 오리산업계에서도 중오리농가와 부화농가의 투명한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황과약은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중오리검정사업과 향후의 오리개량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다섯째, 가금수급안정기금의 유지를 정부에 건의한다. 없는 기금도 만들어서 농가를 지원해도 부족한 미비한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가금수급안정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가금업계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치라고 본다. 만약 폐지하려면 이와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마련한 후에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선결 문제의 해결 없이 지원이 된다면, 지원되더라도 오리업계는 수용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대책을 수용할 수 있는, 위에서 열거한 5가지의 오리업계 인프라에 대한 사업을 먼저 해결하여 주기 바란다.